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2016.7.12.(화) 조간 이후</b>	<b>배포</b>	<b>2016.7.11.(월)</b>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(02-2100-2610)	<b>담 당 자</b>	사 무 관 전 동 연(02-2100-2614)	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구 경 모(02-3145-8020)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윤 창 의(02-3145-6770)		은행제도팀장 김 용 태(02-3145-8030) 저축은행총괄팀장 이 길 성(02-3145-6772)	

## 제 목: P2P 대출에 대한 T/F팀을 구성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### 1. 추진 배경

- ☐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, 그 현황과 해외 규제사례에 대하여 '16.7.1일 '금융개혁추진위원회'에 보고하고 심도있게 논의
- ☐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주문하고, 필요시 '가이드라인' 제정 등의 추진을 권고
  - P2P 대출시장은 창의·혁신적인 업체의 진입을 통해 대출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문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
  - 그러나,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의 사례\*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

\* (美) 'Lending Club'의 부정대출, (中) 'e쭈바오'는 허위정보로 자금모집 후 유용

➡ 현 시점에서는 '유연한 울타리' 내에서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,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

### 2. 추진방안 (T/F구성·논의)

- ☐ 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적·다각적 논의를 위해 관계 기관·부서를 포괄하는 'T/F팀'을 구성·운영
  - 금융위 사무처장을 T/F팀장으로, 금융위·금감원·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할 계획(필요시, 업체 관계자 등도 참석)
- ☐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·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마련
  - 확정수익 보장, 거짓·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와 아울러, 상품·업체에 대한 정보공시,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
  - P2P업체뿐만 아니라, 투자자·대출자·연계금융기관(대부업체, 은행, 저축은행 등)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
  -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되면,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

### 3. 향후 계획

- ☐ P2P 대출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

※ 기존대로,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상황 점검 지속 병행

- ① T/F Kick-off 회의 개최 : 7월중
- ②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: 9월중
- ③ 외부의견 수렴 및 최종안 확정 : ~9월말
- ④ 가이드라인 시행 : 10월~

## 1. 국내 P2P 시장동향

※ '16.3월 기준 영업중인 20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기준

□ (업체수) '16.3월 기준, 20개 업체(대부업 등록 19개, 저축은행 제휴 1개)가 영업 중으로, '15년 말(17개사) 대비 3개사 증가

□ (대출규모) '16.3월말 기준 '대출잔액'은 723.7억원으로, '15년 말 350.3억원 대비 약 2배 증가 ※ 20개사 중 18개사 기준

○ '대출건수'는 '15년말 대비 9.8% 감소(3,624건 → 3,270건)한 반면,

○ '1건당 평균 대출금액'은 '16.3월 기준 22.1백만원으로, '15년 말(9.7백만원) 대비 127.8% 증가

□ (대출유형) 대출잔액 기준으로 법인대출의 비중은 49.7%이나, 대출자 수로는 개인신용대출이 84.8% 차지 ※ 20개사 중 15개사 기준

## &lt; P2P대출업체 대출유형 &gt;

(단위 : 억원, 명, %)

구 분	개인 신용대출	개인 담보대출	법인 신용대출	법인 담보대출	합 계
대출잔액(%)	221.5(30.9)	139.2(19.4)	114.5(16.0)	241.3(33.7)	716.5(100)
대출자수(%)	2,704(84.8)	182(5.7)	215(6.7)	88(2.8)	3,189(100)

□ (업체별 현황) 신규업체가 고신용자·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및 부동산 담보 대출 위주로 급속히 성장

○ 대출잔액 기준으로, 신규업체 중 상위 4개 업체의 비중이 전체 P2P 대출잔액의 64%(463억원) 차지

## 2. 해외 P2P 시장동향

□ (미국)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, P2P 대출잔액이 '14년말 55억불에서 '15년말 120억불로 증가(118.2% ↑)

○ 한편, '16.5월 Lending Club의 대출부정 사건이 발생하여 향후 P2P 대출시장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상존

\* 대출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2,2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중개

□ (영국) P2P 대출잔액이 '14년말 16억불에서 '15년말 35억불로 크게 증가(8개 대형 P2P업체 기준, 118.8% ↑)

○ 전체 누적대출(65억불) 중 기업 대출이 37억불(56.9%)로 기업 대출 비중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

\* (기업대출 비중) '13년말 38.9% → '14년말 51.3% → '15년말 56.9%

□ (중국) 기준금리 인하, 개인·자영업자 대출 수요 등으로 P2P대출 잔액은 '15년말 667억불('14년말 157억불)으로 큰 폭 증가

○ P2P대출의 급성장 과정에서 대출사기\*, 중개업체 도산, 고객정보 유출 등 각종 금융사고 빈발

\* 업계 4위인 'e쭈바오'는 허위정보로 자금을 모집하여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로 적발

○ 7월부터 등록의무, 영업 및 투자자보호규제 등 포괄적 규율체제를 마련한 '네트워크 대출정보 중개기구 업무활동 관리 집행방법' 시행

□ (일본) '15년말 대출잔액은 5억불로, '14년말(2.9억불) 대비 약 73% 증가

○ 은행으로부터 용자를 받지 못하는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

### 3. 해외 P2P 시장 규제 현황

- (미국) P2P 업체만을 규율하는 별도 법은 없으며, 대출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SEC의 규제를 적용하고, 대출행위 등과 관련하여 은행 비밀법(Bank Secrecy Act), 이자제한법(Usury Laws) 등을 적용
  - 미 재무부는 '온라인 대출시장의 기회와 도전'이란 보고서('16.5월)를 통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 제시
    - 신용평가기술 발전, 차입자 정보공개와 은행비밀법간의 조화, 사이버 보안 강화, 투자기반 확대, 정부부처간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
- (영국) '14.4월부터 크라우드펀딩의 한 형태로서 영업행위감독원(FCA)에서 규율(근거규정: Crowdfunding Instrument)
  - P2P 업체에 대해 인가 의무, 최소자본 규제, 고유재산과 고객재산의 구분 관리, 공시의무(수익률, 부도율, 신용평가내역 공개 등) 등을 규제
- (중국) 그간 개인·자영업자 대출 수요 해소, 핀테크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P2P대출 규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나,
  - 대출사기 등 금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, 은감위에서 '네트워크 대출 정보 중개기구 업무활동 관리 잠행방법'을 제정('16.7월부터 시행)
    - P2P 업체에 대해 등록의무 부과, 영업행위 규제(확정수익 보장, 거짓·과장광고 금지 등), 투자자 보호(고객자산 분리예치, 선관의무 준수 등), 공시의무(차입자·업체 기본정보 공개 등) 등을 부여
- (일본) P2P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며, 해당 업체가 대부업 또는 금융상품거래업으로 등록하고 해당법상 규제만 적용